

분리발주 법제화 위한 의견 수렴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9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9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업계 ‘乙’ 지키기 제도개선 차원에서 불법·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실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및 일반·전문 건설업체 관계자와 건설근로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말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창조경제 추진전략 중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를 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의 타당성과 국가계약법 개정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유호선 송실대



토론회에서는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업계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계공학과 교수,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과장, 권오린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일정규모(100억원, 40%, 3개업종 참여) 이상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민수 연구위원은 “분리발주보다는 하도급불공정 해소제도 마련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에 대해 설비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건설 하도급시장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가하도급, 불공정, 부당특약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단순히 하도급 제도 몇 가지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분리 발주된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시공함으로써 하도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능 인력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아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중소기업 강국들은 분리발주를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유호선 교수는 또한 “기계설비와 같이 학술

적, 기술적 특성이 독립되어 있고, 설계도서와 시공은 이미 분리돼 있는 공종은 당장 시행하여도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만이라도 분리발주 제도의 의무화를 도입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건설업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개선과 분리발주 제도를 서로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주기관의 현 상황과 능력 및 공사의 특성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발주는 관련 업계간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린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은 “분리발주에 따른 직접시공으로 불공정하도급 문제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국가 예산낭비와 영세 전문업체의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대책이 분리발주 법제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